

美國 議會의 産業 技術 관련 立法 動向

譯編·尹文涉 (기술 평가 연구실)

I. 産業 技術 관련 입법의 배경

미국은 세계의 군사·경제의 주역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역할을 계속 주도하기 위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전 보장 측면에서 사활이 걸린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근년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급속한 추격을 받게 되자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5~6년 간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강화를 기치로, 특히 1986년 대통령 자문 위원회 영 위원회의 답신 이후 다양한 그룹이 활발하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 기술 정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각종 경쟁력 법안의 제출과 이를 둘러싼 의회의 심의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입법 정책의 주요 이슈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1) 첨단 기술 산업의 진흥, 강화에 관련된 세계 우대 조치
- 2) 정부 보조금과 저리 융자에 의한 조성 정책 수단 강구
- 3) 특정 첨단 기술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
- 4) 미국 내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산·학·관 공동 노선의 추진과 상업화 촉진
- 5) 특정 전략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 추진
- 6)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독점 금지법 및 규제 완화에 의한 기업 컨소시엄 활동 강화

미 의회 내에서는 상기한 산업 기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레이건, 부시로 이어진 공화당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불

만을 갖고 있다.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는 통상 및 산업 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이 명확한 이니셔티브와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무역 技術 촉진 법안의 심의 상황

『1989년 무역 기술 촉진 법안』은 상원에서는 정부 운영 위원회 위원장인 존 글렌(민주당)이, 그리고 하원에서는 멜 레빈(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방 정부 조직의 개혁이 그 주요 내용이다. 동법안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현재의 상무성을 산업 기술성으로 개명·재편한다.
- 2) 산업 기술성은 산업청, 기술청, 무역 진흥청의 3개 기관으로 구성한다.
- 3) 국방 고도 연구 계획국(DARPA)의 민간관으로서 기술청 내에 첨단 민간 기술국을 신설하고, 산업 기술의 발전 응용에 관한 기업 주도의 연구 공동체 촉진, 지원한다.
- 4) 기술청 내에 국제 기술 모니터부를 신설, 국제적인 기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한다.
- 5) 산업청 내에 수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 6)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확대, 산업 통상 장관, 재무 장관, 통상 대표를 참여시킨다.

이 법안 제출의 배경에는 이제까지 레이건, 부시로 이어진 불간섭주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 내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며, 무역 적자의 경감,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려는 이들의 강력한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1988년 포괄 무역 경쟁력법은 의회가 미국의 산업 진흥과 의

국 시장의 개방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1988년 포괄 무역 경쟁력법의 제정 시에도 고도 민간 기술국의 설치안이 제안되었으나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안전 보장상의 중요 요소로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동법안의 제안자인 글렌은 제안 취지로서 국가 안전 보장 정책 결정시 무역에 관한 고려를 보다 중요시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것이 경쟁력 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법안은 『미국제품과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마케팅 또한 기술 개발과 응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제무역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목표』라고 시작되며, 민간의 연구 개발 컨소시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익상 연방 정부가 그 역할을 확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업계에 일정한 직접적인 자금 원조를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전반의 연구 개발 촉진과 기술 개발 및 이의 응용 확대』로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Ⅲ. 국가 공동연구 개정법안의 심의 상황

미국의 정부, 민간 양부문으로부터 현행의 특허 금지법을 한층 더 완화·개정하여 기업 간의 공동 생산을 위한 컨소시움 결성과 운영을 인정하고 장려 촉진하자는 구상이 최근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84년 독점 금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전미 공동 연구법이 입법 제정되어 기업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후 동법의 효과가 나타나 약 130여 개('89년)의 공동 연구 개발 컨소시움이 결성 등록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SEMATECH를 들 수 있는데, 14개의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성은 국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는 조건 없이 컨소시움 운영 경비의 절반인 연간 1억 달러를 지원

하고 있다. 이제까지 연구 개발에 한정되어 있던 공동 체제를 막대한 생산 및 제조 코스트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종 업종의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생산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가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제조 컨소시움의 예로서 US 메모리社를 들 수 있다. 일본 기업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D-RAM 시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찾으려는 목적으로 I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 및 컴퓨터 기업이 참여할 공동 생산 계획을 1989년 발표했었다.

1989년 말, 하원 법사 위원회의 『경제·상업법 소위원회』는 US 메모리社의 결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동 생산 컨소시움을 둘러싼 토론의 장이 되었다. IBM의 잭 켈러 사장은 “일본과의 해외 경쟁에 직면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 생산 벤처는 미국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하며 “일본과 유럽에 유사한 사례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공동 생산 컨소시움은 가격 협정을 조장하고 기술 혁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쟁 기반의 형성에 유해하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쟁 중에 많은 위원들은 독과점 금지법의 완화 개정에 의한 공동 생산 컨소시움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하원에서는 이의 결성이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현행법의 개정을 제한하는 3건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부시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법성이 개정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첨단 기술 제조 업체의 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추진하고 있다.

Ⅳ. 기타 산업 정책에 관한 논쟁

1. 민주당의 첨단 기술 산업 촉진 기술 정책 계획

하원의 민주당 리더 그룹은 1990년 6월 미소 및 동서 간의 긴장 완화를 배경으로 특정 산업 기술에 대한 조성 및 원조를 자유 정신에 어긋나는 산업 정책이라고 일절 배제하려는 부시 정권

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무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경제·산업 경쟁력 유지 확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첨단 기술을 위한 행동 과제』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7개의 주요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1) 산·관 협동 촉진
- 2) 기술 이전의 향상·개량
- 3) 산업 규제 개혁
- 4)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강화
- 5) 연구 개발에의 정부 지원 증대
- 6) 첨단 기술 제품의 대외 수출 진흥
- 7) 첨단 기술 산업의 보호에 의한 국가 안전 보장의 확보

이 그룹의 리더이며 하원의장인 톰 필리는 “결코, 특정 산업을 결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며 타 외국들이 첨단 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 미국 산업이 경쟁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단의 원인이므로 미국도 경제 정책으로서 산업을 촉진 진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인 리차드 게파트는 “산업 기술 지원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멤버와 일전을 치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은 경쟁력에 있어서 무척, 무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민주당과 행정부와의 산업 기술 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는 예산 심의에서 표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민주당은 1988년 포괄 무역 경쟁력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상무성의 첨단 기술 프로그램(ATP)에 있어서 1989년 1천만 달러 예산 규모를 향후 3년 간 총 4억 달러로 일거에 증액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관리 예산국(OMB)은 행정부 요구 예산액인 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ATP에 참여 대상 기업에 있어서도 외국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차별되는 안 된다는 상충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2. 미국 기술 공사 설립 법안 공청회 등

1990년 9월 12일 하원 연구 기술 소위원회는 멜 레빈(민주당)과 톰 리더(민주당)가 제출한 법안 H.R. 4715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법안은 정부가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전략 첨

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사인 미국 기술 공사(TCA)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동 법안에 의하면 TCA는 1991, 1992, 1993 회계연도마다 5천만 달러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이다. TCA는 정부가 설립, 기업이 비영리 공사로 운영하며, 설립 목적으로

- 1) 미국 국내 산업의 니드에 보다 정확하게 맞추어 연방 정부의 비군사 부문 연구 자금을 전용하며
- 2)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 및 전략 기술 분야에서 제조 활동을 지원하고
- 3) 산·관·학 공동에 의한 컨소시움을 촉진하며

4) 국가 기술 기반에 관한 전략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바렌틴 의원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라디오 기술 개발에 있어서 RCA社의 성공을 예로 들어, RCA社는 미국이 갖고 있는 라디오 기술 특허를 Pool로 하기 위해 컨소시움으로서 시작했고, 해군이 주주의 하나이기도 했으며 RCA 육성에 있어서 정부가 했던 역할을 강조하여 TCA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연방 의회 합동 경제 위원회는 『세계 경제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관해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고, 1981년 9월 말부터 10월까지의 상원 과학 기술 소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과학 기술 정책의 검토 평가』라는 포괄적인 제목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기술 정책에 관한 미국 의회의 활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개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시 정권과의 인식 차이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첨단 기술 분야의 대기업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학계 및 연구계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JETRO 기술 정보 301호〉